

# 김영란법 1년... 접수 4052건 · 제재 38건

### 외부감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 3190건 > 금품 등 수수 620건 > 부정청탁 242건 순... 신고 대비 제재율 34.5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위반 건수가 4,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38건(98명)에 불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0개월(7월31일 기준) 동안 관련법 위반 신고는 모두 4,052건 접수됐다. 외부감의 사전 신고 의무 위반이 3,190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 금품 등 수수 620건, 부정청탁 242건 순으로 접수됐다.

관련법상 제재 대상이 아닌 외부감의 지연 및 미신고 사례(사태금 초과 수수만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면 금품 수수 관련 신고가 6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접수된 620건 가운데 실제 신고 처리는 110건이 이뤄졌다.

이중 85건 181명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고, 25건 107명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8건(45명), 기소는 10건(47명)이 이뤄졌다. 신고 처리 대비 실제 제재율은 34.54%에 그쳤다.

부정청탁 관련 신고는 총 242건이었다. 제3자에 의해 신고 된 경우는 201건으로 전체의 83%를 차지했다. 반면 자진신고한 경우는 41건(17%)에 그쳤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요청을 하거나 수사요청 처리된 경우는 11건이었다.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하면 과태료 부과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 개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가 열린 청와대에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송영무(왼쪽부터) 국방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김영문 관세청장, 이철성 경찰청장, 한승희 국제청장, 송영무 검찰총장.

청 대상이고,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수사 의뢰 대상이 된다.

제재로 이어진 부정청탁 위반의 경우 진료시설 이용 관련이 3건, 채용 및 정보 청탁 관련 3건, 학교 입학 청탁 2건, 승인·검사 등 2건으로 집계 됐다.

이 가운데 부하 직원에게 특정회사의 시

설검사 위반사실을 묵인해 달라는 청탁을 한 소방서장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품 등 수수를 이유로 접수된 신고는 620건에 달했다. 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을 한 경우는 85건(181명),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25건(107명)이었다.

신고 접수기관이 자체 조사 중인 경우는

70건이었고, 나머지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종결처리 됐다.

제재가 이뤄진 금품 수수 신고 110건 가운데에는 1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은 경우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10~50만원(27건), 100~500만원(14건), 50~100만원(10건), 500~1000만원(6건), 1000만원 이상(5건) 순이었다. /뉴스

## 이춘석, "DNA채취 절반이 폭력사범"

최근 5년간 검찰이 실시한 DNA채취 건수의 절반 가까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을 위반 등 일반 폭력사범에 대한 것으로 드러나 강력범죄사범을 타겟으로 했던 분래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주적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범죄유형별 DNA감식시료 채취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실시한 DNA 채취 건수 87,344건 중 44%(38,489건)이 폭력범죄 위반 또는 형법상의 상해·폭행,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사범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2016년에는 전체 19,656건 중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 건수가 9,686건으로 49.3%에 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집회나 시위에 참가했다가 주거침입으로 걸리거나 파업현장에서 벗어난 폭력사건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돼 DNA 채취가 집회나 파업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반면, 최근 5년간 살인, 방화, 강간추행 등 강력범죄에 대한 DNA 채취 건수는 17,309건으로 19.8%를 차지해 폭력사범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았다.

이춘석 의원은 "DNA채취가 당초 입법목적에서 벗어나 파업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집회 참가자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DNA정보 수집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다양한 처분인 만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엄격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 문화예술대책위, "이명박·유인촌 철거 수사" 촉구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이하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명박정부의 블랙리스트 사태 및 문화계 불공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탄압은 결코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작 정치는 문서 작성으로 끝나지 않았다"며 "당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계에 대한 불법적인 퇴출 작업을 진두지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인촌 전 장관은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김정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리에서 내쫓은 장본인"이라며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화이트리스트까지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문화예술계를 대상으로 국가 폭력과 범죄를 일상적으로 자행했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은 2000년대 작성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시대착오적인 이념 정책들로 가득했다"고 전했다.

서울연극협회·한국작가회의 등 문화예술계 300여개 단체와 8000여명의 예술인이 결성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지원배제 명단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졌다.

기자회견 후 문화예술대책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KT 빌딩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과 유인촌 전 문화부 장관, 신재민 전 문화부 차관에 대한 조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스

# 檢, 포스트잇 메모지로警 '기소유예 의견 송치' 반려

### 이용호 의원, "경찰 기소유예 의견 활성화 책임수사 위한 시스템 필요"

2016년 추진된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경찰의 비협조와 거부로 시행 1달 여 만에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정식 공문이 아닌 포스트잇 메모지로 '기소유예 의견'은 받지 않겠다고 사전송치 접수를 반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경찰에게 사실상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의 '포스트잇' 반려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수사관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경우 수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한 소지도 있다. 또 수사기관 간의 공문서를 비공식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복수의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유예 의견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의견 변경

을 강제했다"며, "담당 수사관과 피해자, 피의자 입장에서는 신속히 사건 송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경찰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검찰 갑질에 속수무책인 경찰이 책임수사가 가능했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2016년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이하 '활성화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이 제도는 참작 사유가 충분한 피의자에게 형사 사건의 절차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현행법상 기소유예 의견 제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경찰 내부 분위기와 인식부족으로 의견 제시 건수가 미미했던 것이다.

경찰은 관행적으로 기소유예라고 판단되는 피의자에 대해 불기피하게 기소 의견

을 제시해 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의 일종이지만, 혐의가 명백한 이상 불기소 의견을 낼 수 없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활성화 제도' 시행 직후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3월까지 6년 이상 총 140건에 그쳤던 기소유예 의견은 '활성화 제도' 시행 이후 단 38일 만에(16.5.13~16.6.20) 579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의 총계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그러나 경찰의 '포스트잇' 반려 등으로 기소유예 의견 송치 건수는 급격히 감소해, '16년 6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137건, '17년의 경우 6월까지 잠정 45건에 그쳤다. '활성화 제도' 시행 이전으로 돌아

간 셈이다.

경찰의 '기소유예 의견 송치 활성화' 제도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2007년 이후 경찰에서 기소유예로 송치한 피의자 1,268만 3,406명 중 26%(329만 212명)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 됐다. 불기소처분 83.16%(273만 786명)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다. '기소유예'가 검·경 기소·불기소 불일치의 주원인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용호 의원은 "피해자와 피의자는 형사 절차 하나하나에 정신적 압박감이 생기고, 때로는 생계를 위협받기도 한다"며,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나 경찰의 무책임한 송치의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건 결국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경찰이 소신 있게 기소유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송치의견과 검찰 처분, 법원 최종판결 결과가 크게 상이할 경우, 승진이나 인사 상 불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 즐거움과 함께하는 2017 **임실N 치즈축제**

웃어봐요! 치~즈~ 행복 쪽~~^^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추석	5	6	7
8	9	10	11	12	13	14

**주요 프로그램**

천만송이 국화전시, 전국어린이 요리경연대회, 제2회 전국어린이치즈창작동요대회, 전국 스타셰프 챌린지(최현석셰프), 국가대표 '왕' 치즈피자, 치즈나라 치즈범벅 모자이크, 치즈떡볶이 나눔행사, 치즈 및 낙농체험, 국내·외 치즈전시관, 임실N치즈피자 등 다양한 치즈음식

주최 임실군 주관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한국관광공사 전라북도 [www.imsifestival.com](http://www.imsifestival.com) 063. 643. 3900

2017 축제 보조금지원